

#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연구

---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정기용

- 연구배경 및 목적
- 지방규제의 개념 및 범위
- 지방규제혁신의 개념 및 범위
- 중앙행정기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체계 개선방안
- 중앙행정기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
-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(자치법규) 혁신 추진 방향
-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전략 방안

## 연구배경

- 2024년 2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규제혁신 지역 체감도 제고, 지역별 핵심 숙원과제 집중 해결, 그림자·행태규제 개선성과 창출 등을 추진
  - 이를 통해 ‘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’라는 목표 달성을 추진
-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규제혁신 방안의 부재로 체계적인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한계점이 존재
  -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전략, 목표 등의 연구 필요

## 연구 목적

-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업무 추진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
  - 규제개선 과정 진단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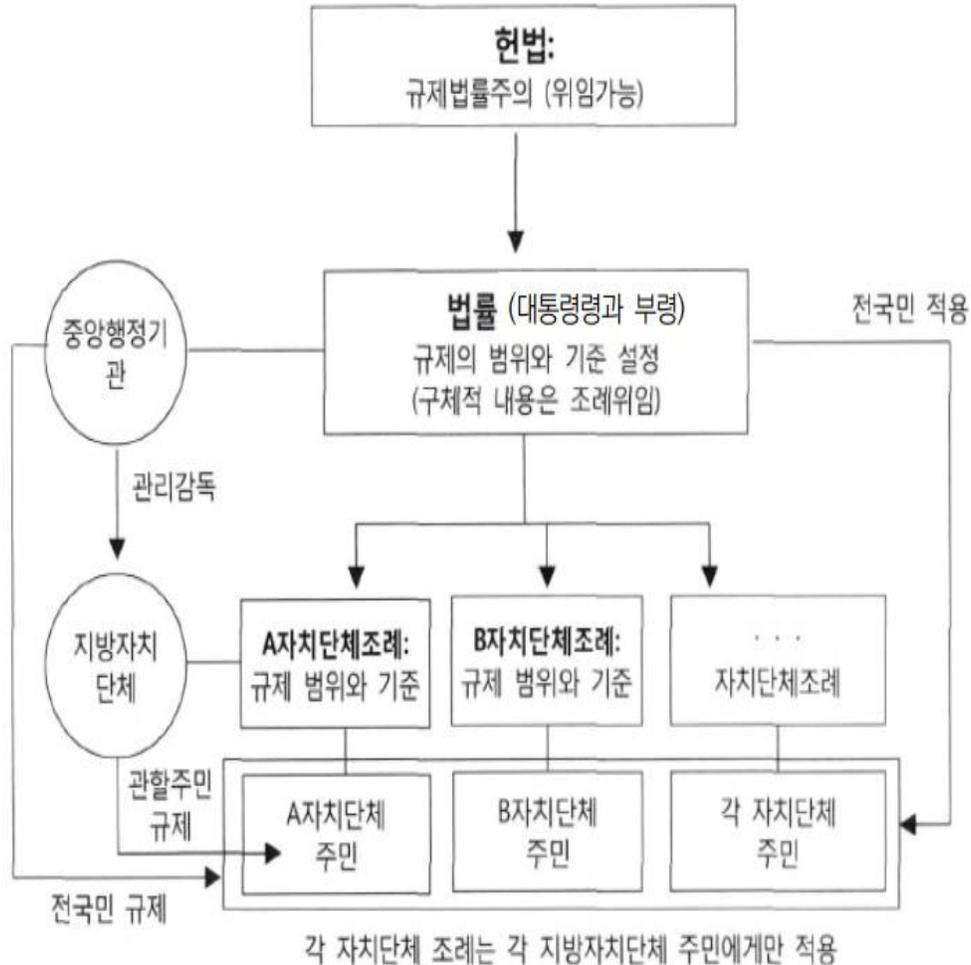
## 행정규제기본법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규제 정의(행정규제)(제2조 제1항)
 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

##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

- 「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」 상 지방규제의 개념(제2조 제3호)
  - 개선을 건의하는 “지역균형발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”하는 “해당부처”의 규제

##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



## 지방규제의 범위

-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를 고려할 때, 지방규제는 전국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를 제외한 중앙의 위임규제 및 독자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를 포괄
-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규제
  -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규제,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중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규제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(자치법규)
 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
  -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·행태 규제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 개선

## 지방규제혁신의 개념

-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
  -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,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,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규제혁신(제3조 제4항)
  - 지방자치단체는 “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”를 하여야 함

## 지방규제혁신의 범위

-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규제
  -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규제,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중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 및 관리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
 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에 대한 관리 및 개선
  - 비등록규제, 누락된 미등록규제, 중복등록규제임에도 단일규제로 등록된 규제, 단일임에도 복수 규제로 등록된 규제 등
  -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·행태 규제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의 개선
  - 명시적인 규정없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행정지도 또는 의무 부과 등 유사행정규제

## 규제개선 추진체계 개요

### 규제발굴

- 지자체, 관련 협회 또는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(지역경제를 저해하는) 각종 규제 발굴
- 지자체, 주민,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 및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발굴

### 규제검토 (관계기관 협의)

-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내부 검토하여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는 단계
- 규제개선 필요성·효과성 등을 근거로 규제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에 규제개선 권고 및 의견조회
-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,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개선 방안 마련

### 규제해소

- 해당 규제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단계
- 지방규제 관련 전문가, 소관부처 공무원,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안건 심의, 개선권고 등

### 규제개선 및 환류 (이행관리)

- 규제개선 및 환류 단계로 규제개선이 수용된 과제에 대해 이행관리 실시
- 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된 규제에 대해 법령 등 개정 이행 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지속적 이행촉구
- 불수용 과제는 재협의 등 추진

## 규제개선 추진체계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

### 규제발굴

### 규제검토 (관계기관 협의)

### 규제해소

### 규제개선 및 환류 (이행관리)

- 현황
  - (지자체) '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'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규제 발굴 후 반기별로 행안부(지방규제혁신과)로 제출
  - (일반국민) '대국민 공모전'을 통해 일상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제안('16년~)
- 문제점
  - 다양하지 못한 규제발굴 채널
  - 지방규제혁신 웹사이트(내고장 알리미) 규제개선 업무 제공 미흡,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신고게시판 연계 등 혼란
- 현황
  - (부처 협의 과제 선별) 발굴된 규제 과제 중 규제개선 필요성,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와 협의과제 선별(대략 40~50% 내외)
  - (핵심과제 선별) 부처 협의 과제 중 지역별 현안·이슈, 대외적 파급력이 큰 과제 등 반기별 50건 핵심과제 선별
- 문제점
  - 소관 부처 협의과제 선별 및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부재
  - 과제 검토 및 발굴된 과제에 대한 품질 제고 등 심층적 검토를 위한 전문적 검토 단계 미비

## 규제개선 추진체계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

### 규제발굴

### 규제검토 (관계기관 협의)

### 규제해소

### 규제개선 및 환류 (이행관리)

- 현황
  - (소관부처 협의)협의를 통해 3단계(수용, 중장기 검토, 불수용)로 규제 개선 협의
  - (위원회 안건 선정)개선 시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선정
  - (상정 안건에 대상 소관 부처·지자체 등 참여한 심의
- 문제점
  - 규제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법령 부재
  - 규제해소를 위한 업부 추진 근거 미비 등 협의 진행 한계 존재
- 현황
  - (개선 수용)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, 개선 효과 검토, 성과평가 등 실시
  - 우수사례 평가(경진대회 실시), 성과평가 등을 통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
- 문제점
  - 수용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등 규제 개선 사후관리 과정 미비
  - 개선된 과제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사후영향분석 과정 미비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- 온라인 규제발굴 플랫폼 구축
  - 지방규제혁신 웹사이트(내고장 알리미),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, 지자체 규제개혁신문고 등과 게시판 연동 등 추진 및 규제발굴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
- 행정심판 등 자료를 활용한 규제발굴
  - 소상공인이 제기한 영업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제기한 행정심판 사례 중 규제해소가 필요한 사례 확인 및 검토
- 유관협회 대상 규제발굴
  - 실무적 시각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유관협회와 함께 발굴 추진

###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###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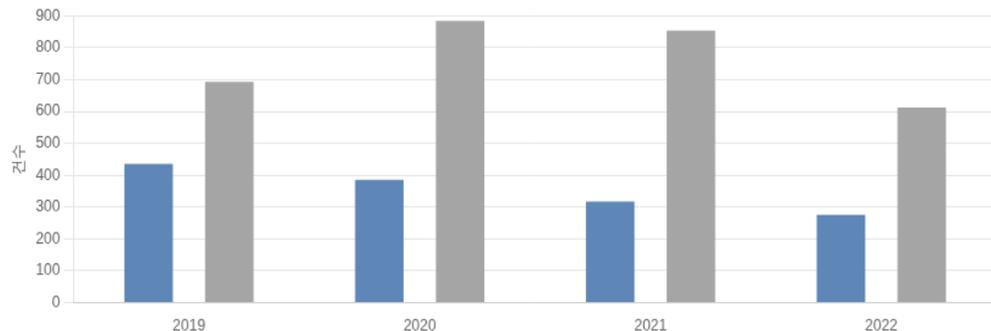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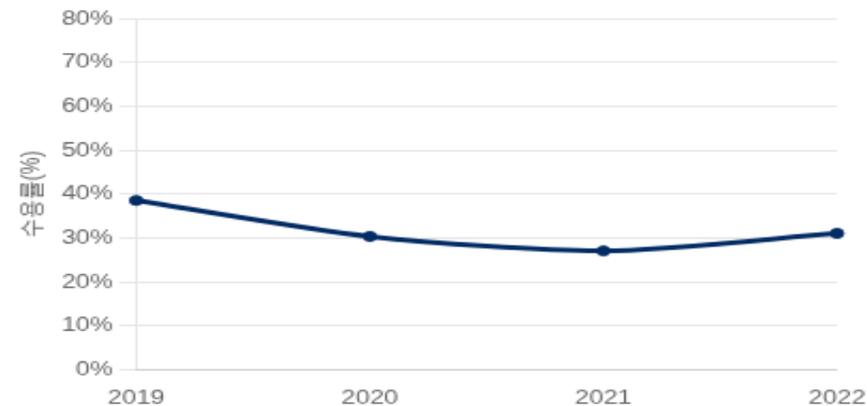
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연도별 수용/불수용 현황



연도별 수용률



2019~202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 현황(건수, %)

| 연도   | 발굴    | 협의    | 수용    | 수용률   | 불수용   | 불수용률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19 | 1,981 | 1,127 | 435   | 38.6% | 692   | 61.4% |
| 2020 | 2,309 | 1,270 | 386   | 30.4% | 884   | 69.6% |
| 2021 | 2,445 | 1,170 | 317   | 27.1% | 853   | 72.9% |
| 2022 | 2,409 | 888   | 276   | 31.1% | 612   | 68.9% |
| 합계   | 9,144 | 4,455 | 1,414 | 31.7% | 3,041 | 68.3% |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 품질 향상 필요
- 현행 문제점
  - 지자체 간 제출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의 내용 편차가 큼
  - 핵심 요소 누락(추진배경, 목적, 효과성, 실효성, 이해관계자 의견 등)
  - 규제개선에 따른 정성 및 정량적 효과 근거 부족, 유사사례 검토 미흡 등
- 개선 방향
  - 필수 항목 표준화, 근거 첨부 의무
  - 규제개선의 효과 제시(정성적 또는 정량적) 등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###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###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현행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 양식

**[시도연번]**    **제목** \* 내용 파악이 용이하게 정확하게 기술!!!

**현황 및 문제점**

- (현황)
- (문제점)

**개선방안**

- 

\*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32조<br>① ~ ③ (생략)<br>④ <신설> | 제32조<br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한다. |

**개선효과** \* 직·간접 효과 명시(가급적 정량적 효과를 포함하여 기재)

- 

**전문가 의견(요약)**

\* 규제개선의 타당성,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적 건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요약하여 기재(전문가 서면의견서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)

- 

※ 전문가 정보 : 000원 000과    \* 소속 기관 몇 부서명 작성

| 구분  | 직위(직급) | 성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
| 담당자 |        |    |     |    |

**부처 의견(요약)** (23.1.20. 유선/대면/이메일 등)

(수용 일부수용 기시행 증장기검토 수용곤란)

\* 소관 부처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요약하여 기재(기존 부처협의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, 신규 사례의 경우는 유선/대면 협의 등 진행)

- 
- 
- 
- 

※ 담당자 정보 : 000부 000과    \* 소속 부처 몇 부서명 작성

| 구분  | 직위(직급) | 성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
| 담당자 |        |    |     |    |

**안전 발굴 담당부서** : 000국 000과 \* 지자체 건의자 정보 작성

| 구분   | 직위(직급) | 성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
| 담당국장 |        |    |     |    |
| 과장   |        |    |     |    |
| 담당자  |        |    |     |    |

\* 관련법령, 추진경과, 기업현황, 현장사례(관련기사 등), 전문가의견·부처의견 서면본 등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

- 작성항목

- 필수항목: 현황 및 문제점, 개선방안, 개선효과, 전문가 의견
- 선택항목: 관련법령, 추진경과, 기업현황, 현장사례, 전문가의견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 품질 향상 필요
- 작성 필요 항목
  - 규제개요: 규제사무명 / 규제내용 / 규제조문 / 위임법령 /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/ 신고조문 대비표
  -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: 추진배경 및 필요성 /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
  - 규제개선 효과성: 규제집행 현황 / 경제적 효과성 분석 / 부수적 효과
  - 규제개선 실효성: 유사사례 검토 / 이해관계자 의견검토
  - 종합결론: 요약 및 개선방안
  - 별첨: 경제적 효과성 분석 산출표, 부수효과 상세, 의견조사표 등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규제개선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필요
  - 소관 부처가 규제해소 의견을 수용한 과제에 대한 사후적 이행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규제개선의 효과성 담보의 어려움
  -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수용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처의 법령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, 이행이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이행 촉구 필요
-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 강화
  -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비교하여 기존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역할 수행
  - 지방규제혁신의 전담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권한 미흡 및 의결의 강제성 부족의 한계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###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###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현재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법령이 부재하여 업무 추진근거가 미흡하며, 규제개선을 위한 소관 부처와 협의 시 조정력을 발휘하는데 한계 존재
- 중앙부처와의 규제 개선 협의,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, 지방규제혁신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필요
- 지방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

현행 지방규제 개선 거버넌스 체계

| 주체        | 규제발굴 | 규제검토 | 규제해소 | 개선·환류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행정안전부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방규제혁신위원회 |      |      | ●    |       |
| 소관 부처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|       |
| 지자체·시도연   | ●    |      | ●    |       |
| 일반국민      | ●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전문가 등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개선 지방규제 개선 거버넌스 체계

| 주체        | 규제발굴 | 규제검토 | 규제해소 | 개선·환류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행정안전부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방규제혁신위원회 | 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 |
| 소관 부처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자체·시도연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      |
| 일반국민      | ●    |      |      | ●     |
| 전문가 등     | ●    | ●    |      |       |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### 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###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- 현재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법령이 부재하여 업무 추진근거가 미흡하며, 규제개선을 위한 소관 부처와 협의 시 조정력을 발휘하는데 한계 존재
- 중앙부처와의 규제 개선 협의,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, 지방규제혁신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필요
- 지방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
  - 규제발굴 단계에서 지자체, 시·도 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한 규제발굴, 기업체 및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
  - 규제검토 단계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심에서 규제개선 과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소관부처, 자치단체, 시·도연구원,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업
  - 규제해소 단계에서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, 행정안전부, 지자체, 소관부처 중심에서 시·도 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규제해소 방안 마련 필요
  - 규제개선·환류 단계에서는 행안부 중심에서 지방규제혁신위원회, 중앙행정기관, 주민 간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이행관리 추진 필요

#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

##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규제개선 발굴 채널의 다각화

규제개선 발굴 과제 수용률 제고

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

현행 지방규제 개선 거버넌스 체계

| 주체        | 규제발굴 | 규제검토 | 규제해소 | 개선·환류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행정안전부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방규제혁신위원회 |      |      | ●    |       |
| 소관 부처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|       |
| 지자체· 시도연  | ●    |      | ●    |       |
| 일반국민      | ●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전문가 등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개선 지방규제 개선 거버넌스 체계

| 주체        | 규제발굴 | 규제검토 | 규제해소 | 개선·환류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행정안전부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방규제혁신위원회 | 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 |
| 소관 부처     | 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 |
| 지자체· 시도연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      |
| 일반국민      | ●    |      |      | ●     |
| 전문가 등     | ●    | ●    | ●    |       |

#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(자치법규)혁신 추진 방향

## 지방규제(자치법규) 업무 절차

-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으며, 이를 국가의 입법권과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함
- 자치법규는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의 역할을 함
- 자치법규의 종류에는 조례, 규칙, 교육규칙, 의회규칙, 회의규칙이 있음

| 단계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|---|
| 규제형성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규제도입, 조례·규칙 입안, 입법예고, 규제심사, 의회 심의·확정 과정이 포함</li> <li>• 지자체가 규제도입 여부 검토 후 규제도입이 필요한 경우 규제안 마련 및 법령의 형태로 입안하여 규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</li> <li>• 규제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 진행</li> </ul> |
| ▽         |   |
| 규제등록 및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규제 공포 및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 단계로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</li> <li>• 법령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제 전담 부서에 규제 명칭, 내용 및 법적 근거 등록</li> </ul>  |
| ▽         |   |
| 규제변경 및 폐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목적이 달성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족성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규제의 변경 또는 폐지하는 단계</li> <li>•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함</li> </ul>               |

## 지방규제(자치법규)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

- 자치규제 영향분석 품질 제고
  - 영향분석서 표준안 개발 및 보급, 지자체 교육, 컨설팅 등
- 자치규제 매뉴얼 전산화
  - 자치법규 규제 매뉴얼 및 사례 DB의 업데이트, 전산화 등(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)
- 등록규제 DB 구축 및 고도화
  - 인공지능을 활용한 규제 오류(판단 오류, 갱신오류, 등록오류 등) 검색·탐지 등 기술 개발

###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

### 지자체 그림자·행태 규제개선

## 지방규제(자치법규)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###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

###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

### 지자체 그림자·행태 규제개선

- 판단오류 등록규제 정비
  - 오등록(행정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한 경우) 및 미등록(행정규제임에도 규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)에 대한 규제판단 명확화 및 등록규제 정비
- 갱신오류 등록규제 정비
  - 조례 미갱신 오류(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개·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의 개·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) 및 등록 미갱신 오류(지자체 조례 개·폐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을 미갱신한 경우 탐지 및 정비)
- 등록오류 등록규제 정비
  - 축소 등록(여러 개의 조문에 걸친 규제를 하나의 규제로 등록한 경우), 분할 등록(하나의 조문을 여러 개의 규제로 등록한 경우), 불일치 등록(자치법규명 또는 조문번호 오류, 미기재 등) 탐지 및 정비

## 지방규제(자치법규)혁신 추진 방향 및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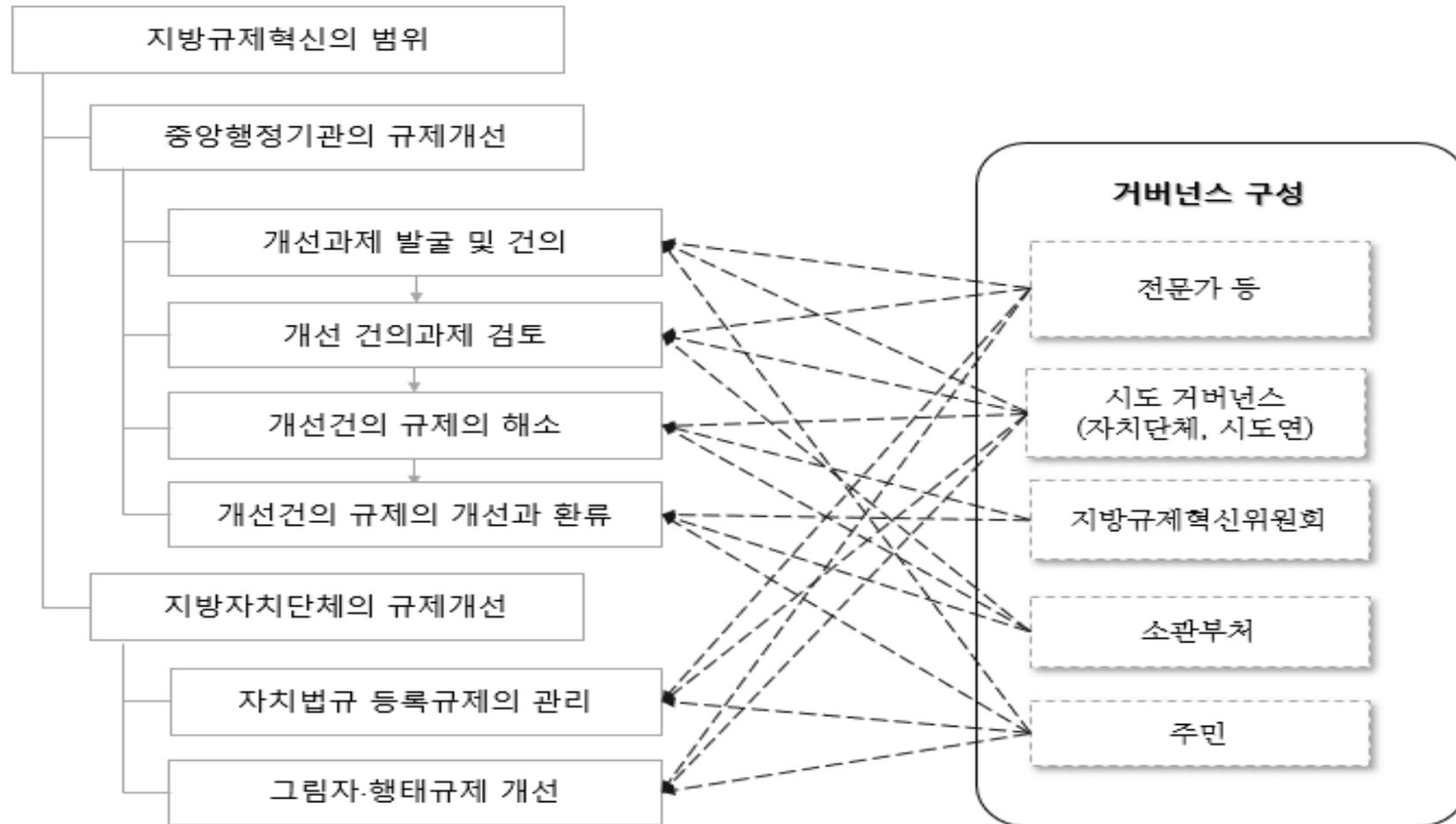
###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

###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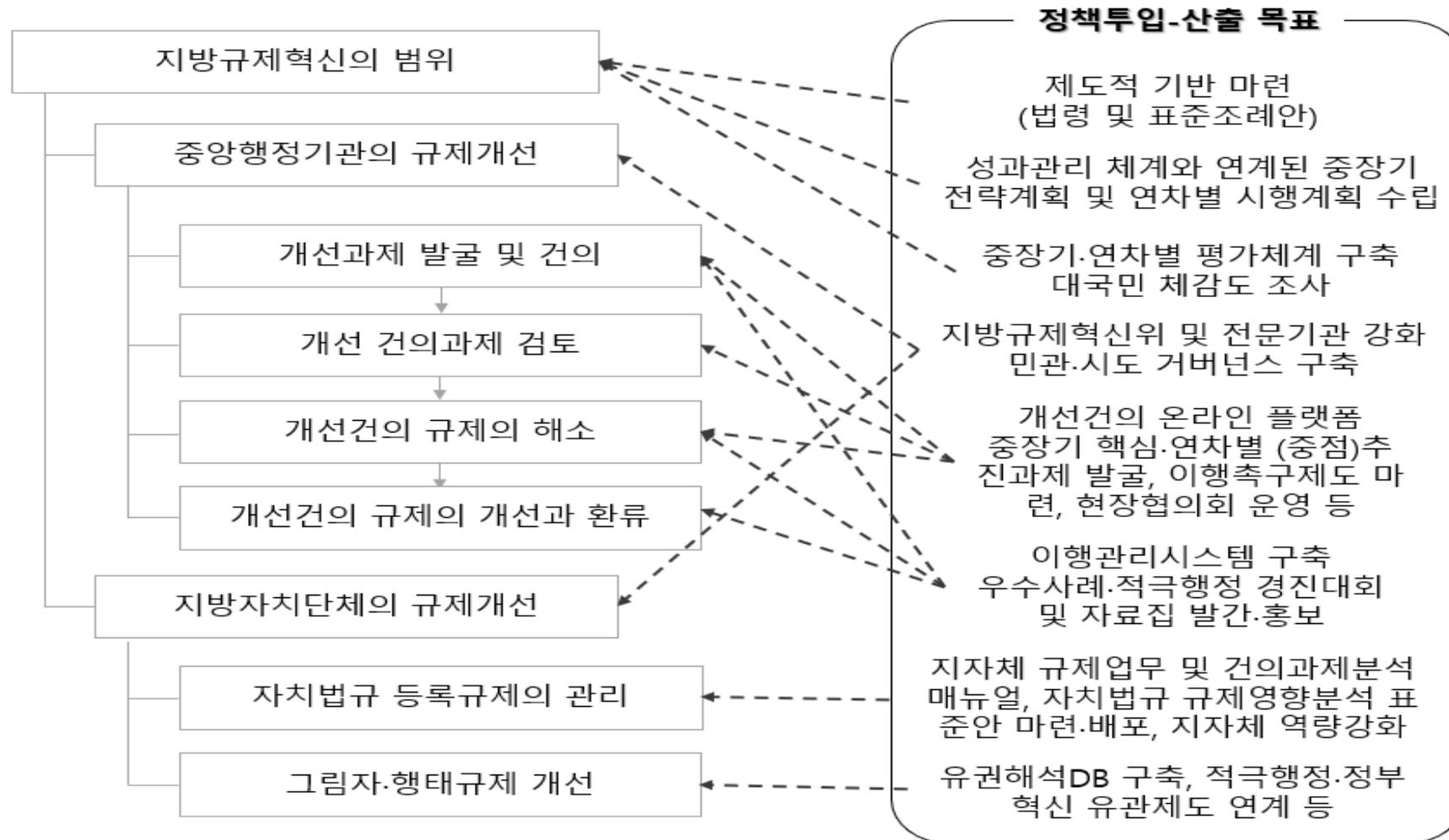
### 지자체 그림자·행태 규제개선

- 그림자·행태 규제 발굴·해소를 위한 자치규제 입증책임제도 활성화
  - 시·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역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, 그림자 규제 체크리스트 도입·시행, 전문기관의 지역맞춤형 컨설팅 등
- 적극행정 시스템 연계
  - 그림자·행태 규제의 해소를 위한 기관장 리더쉽,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및 연계 강화,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및 특교세 지원,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, 사전 컨설팅 활성화 등
-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및 그림자·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에서 시·도 거버넌스(지자체, 시도연), 기업체 및 전문가 등의 민·관 거버넌스, 일반국민 참여 필요

##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



##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



**감사합니다**